

21세기 세계 초일류 기업을 위한 과제

토론회



- 일시** 1996년 5월 13일(월) 14:00~16:00
- 장소** 롯데호텔 Jade룸
- 사회** 송병락 교수(서울대학교)
- 주제발표** 박수일 교수(서울대학교)
- 토론** 김서웅 편집이사(서울경제신문)
 김수행 교수(서울대학교)
 손병두 부원장(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선임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가나다순>



김중웅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김중웅: 우리 기업이 21세기에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적응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연구원의 중요한 연구 테마입니다. 따라서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단기적 또는 장기적 과제를 토론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좋은 결론은 정책에 반영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21세기 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함에 있어서 이제는 기업을 단순히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무기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국민이나 국가에 큰 공헌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아야 올바른 기업의 역할 내지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21세기 세계 초일류 기업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를 놓고 정부, 기업, 국민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디 활발한 토론으로 좋은 결론을 맺으시길 기대합니다.

사회: 요즈음 한참 대기업 정책이 논의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오늘의 토의는 참 시기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럼 먼저 곽수일 교수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발표

곽수일: 토론의 주제가 '21세기 세계 초일류 기업의 과제' 인 만큼 앞으로 세계 초일류 기업에게 주어지는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도전과 기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업 경영을 세계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1세기의 도래와 때를 같이하여 일어나고 있는 정보 혁명에 어떻게 적응하여 정보화 사회의 선두 기업이 되는가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기업의 세계화는 경영 측면에서 현재의 생산 체제나 영업 체제를 단기간 내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세계적인 상표로 확립되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 어느 한 회사가 이를 모두 생산하기보다는 다른 기업들에게 생산을 의뢰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규모의 경제 논리에 입각한 대규모 생산을 통해 원가 경쟁을 하는 것이 전략의 큰 흐름이었다면, 최근의 변화는 네트워크(Network) 경제를 통하여 세계 각국에 산재하고 있는 생산 요소들을 최적 활용하는 것이며, 따라서 네트워크 핵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은 세계화의 추세가 가속화함에 따라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초일류 기업의 첫번째 과제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디자인하고 유지하면서 핵심 역량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21세기와 더불어 전개되는 정보화 사회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



박수일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히, 컴퓨터와 정보 통신 기술의 합작 결과로 지식 및 정보의 생산 기여도가 증가하고 새로운 생산, 영업 및 관리 체제를 설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생산 및 영업 체제를 무용지물로 바꾸어버릴 것이며, 정보 혁명에 적응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만이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즉, 과거에는 기업이 원가나 품질을 가지고 경쟁에서 이겼다면, 앞으로는 정보를 가지고 이긴다는 경영 패러다임을 새로이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21세기의 주역을 담당할 사회 기구는 바로 기업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자유 시장 경제의 유지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 전체의 부를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복지와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업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급하고,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이들 제품과 서비스를 확대·재생산하는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의 발전을 위한 혁신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성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는 제품과 서비스의 측면에서 시장이나 소비자의 욕구를 창출하고 만족시키기 위한 혁신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 활동이나 기술에 대한 혁신입니다. 이와 같이 기업은 단순히 사업 기회를 추구하기보다는 기회를 창출해내고, 기술의 사용자가 되기 보다는 발명가가 되고, 자원의 최적 이용자가 되기보다는 자원을 개발하는 데 그 노력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셋째, 변화의 관리자로서 우리 주위의 정치, 경제, 사회 및 기타 물리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주역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우리 사회 각층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즉, 이러한 변화의 일차적 관리자가 바로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대응 방안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회, 정치, 경제와 기타 생활 여건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가장 대표적이고 결정적이며 지배적인 기구'라고 한 피터 드러커 교수의 말과 같이, 기업은 자본주의 사회의 중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번영과 발전을 통해서 국민의 이익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자본주의제도인 만큼, 자유기업주의가 제대로 발달·번영되어야 우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기업이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과 정부의 과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기업은 단순히 이익을 내기 위한 경제적 단위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구(social institution)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부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고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여 경제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이며 대기업의 발전이 바로 중소기업의 발전이요, 이들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가 성장한다는 인식과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업은 기업의 기본 목표 가운데 하나인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이제는 사회가 인정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방식에 입각하여 행동함으로써, 사회에서 공인하는 기업의 이익이 되도록 경영 이념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기업은 각계 각층에서 분출하는 사회적·경제적 욕구를 조화시키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창조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숨페터적 기업가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이상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어떤 연유로 기업이 와해된다면, 궁극적으로 경제가 후퇴하고 사회 전체가 침체의 구렁이로 빠져 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온 계획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는 경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도 미래 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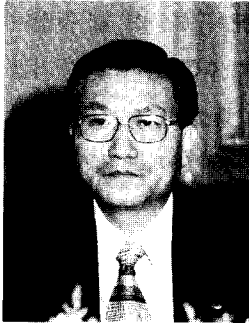


송병락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사회: 주제 발표에서 말씀하셨듯이, 초일류 기업은 네트워크 내에서 핵심 역량을 보유해야 하는데, 그 '핵심 역량'이라는 단어가 조금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곽수일: 핵심 역량에 대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대기업을 보면 전부 스스로 조달하고, 자기 기술로 생산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까지 생산이나 마케팅이 경영 활동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을 하나 딱 가지고는 나머지는 전부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것입니다. 나이키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라는 핵심 역량을 제외하고 생산, 기술 개발 등은 전부 아웃소싱합니다. 이러한 것이 21세기의 네트워크를 짜는데 핵심입니다.

손병두: 과거에는 사실 아웃소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아웃소싱을 할 만큼 다른 산



손병두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업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방화되면 아웃소싱을 국제 무대에서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은 정보력을 갖추는 것과 확실한 핵심 역량을 보유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규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외국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데 비해, 우리 한국에서는 다른 국내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을 왜 해외 기업에게 시키느냐는 식의 정서와 각종 규제가 강해서 꺼리는 형편입니다.

핵심 역량을 가진 기업만이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국내에서 이러한 역량과 네트워크를 움직일 수 있는 정보력을 가진 것은 대기업인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의 규모나 사업 다각화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모도 필요할 것입니다. 규모의 힘없이 아웃소싱만 해서 경쟁을 할 수 있었습니까? 또한 대기업의 다각화 문제도 다른 시각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S전자 하나는 무서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받치고 있는 '그룹'이라는 막강한 힘때문에 자기들이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걸 좀 배워야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쁘다,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중국은 지금 배워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의 대기업 정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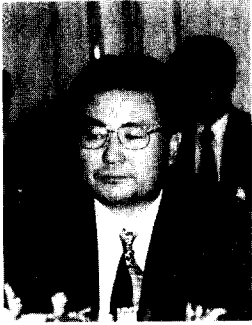


김수행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수행: 상당히 공감가는 부분도 많지만, 전체적인 토론의 흐름이 기업과 정부가 서로 상반되거나 이익이 대치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945년 이후의 복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채택한 사회민주주의 정책도 제가 보기에는 자본을 키우는 방법의 하나였으며, 1975년 이후의 신보수주의 경향도 결국 정부가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하고 정부가 서로 대립하고 싸운다고 보는 개념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정책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하자면, 기업 활동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기업의 역할이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복지와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기업의 이윤 추구하고 사회 전체의 복지와 괴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 대기업들이 국내에는 투자하지 않고 해외에만 투자를 해서 국내 경제의 성장이나 고용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기업의 투자 행태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당장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기업의 경영도 민주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본연의 임무인 경제에 치중하면서 경영의

합리화와 민주화를 추구할 때, 기업이 사회 전체에 주는 영향이 모범적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업 문제는 '재벌'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경영의 민주화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장승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좌승희: 제가 볼 때, 정부가 할 일을 해놓고 나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업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업의 행동은 주어진 환경 속에 적응하는 내생적인 질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어떤 기업 행태를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의 기업 행태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전까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필요치 않는 경제적 여건이 아니었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중소기업간의 협력외 문제에 있어서도 과연 협력이 필요한 경제적 여건을 만들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란 근본적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은 무조건 망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의 장점을 없애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에게 기대를 한다면 경영의 세계화를 추진하되 핵심 역량을 국내에서 유지하고, 또 해외에서 기술과 정보를 습득해서 국내 핵심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게 하는 파이프라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에서 논의된 경영 네트워크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용될 수 있다면 대기업이 국민 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같은 국내 경제 여건 개선에 대해 대기업의 역할이 보다 강조될 것임으로, 정부는 각종 유인 체계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서웅
서울경제신문 편집이사

김서웅: 초일류 기업이 많이 나와야 국가 경제가 선진화할 수 있고, 또 초일류 기업이 나오려면 아까 꼭 교수님 말씀대로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업을 많이 나와야 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해야 될 일도 결국 자기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소위 대기업 집단들의 문어발식 확장과 같은 행태 속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기업도 초일류 기업에 들어가려면 결국 네트워크 전략을 구사할 만한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해야 될 것이고, 또 세계를 앞서가는 첨단 기술 개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기업들은 그러한 의지가 없지 않는가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초일류 기업이 되려고 하면 초국적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속전철과 같은 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자국 기업의 수주를 위해 행정부 인사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면 초일류 기업이라 하더라도 분명 국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에게 맡기면 잘 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자원과 능력을 생각할 때 자칫 힘이 분산되어 초일류 기업에는 하나도 못 들어가고 전부 위성 하청 기업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21세기의 초국경시대에도 국가적 차원의 글로벌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정부가 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통제하는 채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병두: 대기업들이 핵심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다 하였는데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역량을 가지려면 기술에 투자해야 하는데 주요 그룹들이 소속 연구소에 투자하는 비용은 실제로 어마어마 합니다. S전자의 반도체가 저렇게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또 관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깐 그걸 집중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제 그런 사고는 안 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트워킹시대로 들어가는 경영 환경에서 한 업종만 해서는 적응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을 말씀하셨는데, 핵심 역량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길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역량의 기본은 업종이 달라지더라도 유지된다고 봅니다. 대기업들이 다양한 업종에서 성공하는 것은 인재 양성 또는 경영 전략에 있어서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좋은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문어발식 확장이나 업종 전문화니 하는 것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실업이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기업의 다각화 여부는 상관없고 무조건 실업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들이 그간의 정부 간섭에도 망하지 않고 예상외의 성장을 하고 있으니깐 자꾸 규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적 정립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곽수일: 기업에 맡겨야 합니다. 전문화해서 성공하는 기업은 전문화시키고 또 다각화를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은 다각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경쟁 역량에 따라서 판단하게

두어야지. 무조건 나쁘니까 안된다는 식은 곤란합니다.

김서웅: 말씀 다 맞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비난하고 정부는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정부라는 것이 정치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집단도 국민의 비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손병두: 저는 대기업을 비판하는 정서에 있어서 과장되어 있는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반자본주의 심리, 반기업 정신이 지식 사회의 여론을 주도한 점도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

곽수일: 비관련 다각화의 문제를 아웃소싱과 관련해서 이야기 하자면, IBM 같은 회사는 한국에 파는 것보다 한국에서 가져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새로운 추세라면, 대기업들이 비관련 업종으로 마구 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큰 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사소한 사업까지 진출해 들어가는 것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승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비관련 다각화가 무엇인가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화의 진전과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특정 산업이 관련이다 비관련이다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기업을 규제하기도 대단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윤 동기만 있으면 먼저 진입하는 것이 유리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윤 동기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부 주도의 발전 전략에 의한 진입 규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다각화를 하지 말라고 해도 대기업 집단은 다각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소유 구조, 선단식 경영, 기초실의 역할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40 개 기업을 거느리고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한국 경제 여건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장 개방'으로 독점을 막는 것보다 적극적인 산업 정책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손병두: 세계화(Globalization)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장 경제입니다. 정부는 시장 경제가 잘 작동되도록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S그룹이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고 포드社도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하는 문제는 한국 시장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수익성에 대한 계산도 없이 무조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만약 수익성이 없는데 진출했다면, 시장 경제 질서 속에서 그대로 망하게 두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S그룹의 자동차가 망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규제를 하지 않아도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 질서 속에서 문제가 결정되게 해야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영권의 상속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경영권을 주고 싶다면 주도록 하면 됩니다. 만약 경영권의 승계자가 역량이 없으면 그 회사는 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공업사나 대한전선 같은 회사들은 2세 경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예가 아닙니까? 경영자도 2세에 경영 능력에 신뢰가 가지 않으면 물려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까지 정부가 나서서 세금이나 법으로 막는다든지 분리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곽수일: 사실 물려주겠다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초일류 기업이 생겨도 국내 경제에 전혀 기여를 못할 수 있다는 김수행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임금때문에 해외로 나가고, 대기업들은 기술, 노사 관계때문에 나간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영국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엇그제 기사를 봤더니 D그룹의 김희장이 ‘거점 경영’이란 용어를 사용하더군요.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해외 거점에서 돈을 쬐서 그곳에서 생산하다 망해도 한국과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D그룹이나 회사채를 산 사람이 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국내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확산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신고나 허가 절차가 복잡한 사업 활동은 국내에서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노사 관계에 있어서도 양측에 모두 일리가 있는 면이 있지만 기업의 경영 환경이라는 면과 비추어 한번 생각해보야 할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는 요사이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국은 불란서에 있는 질레트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적 특혜도 주고 노동 운동도 포기하고 시키는 데로만 하겠다는 식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는 기업 유치를 위한 거의 사회 전체의 덤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영국의 경우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병두: 제가 스위스에 가서 느낀 것입니다. 현재 선진국들은 복지 정책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 문제는 주요 나라에서 해왔지만, 이제는 돈이 없어 더 이상 복지 정책을 실시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 기업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최대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업이 정부의 고유한 영역이었던 사회간접자본, 교육, 의료 사업에 진출해서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가 살아갈 길은 초일류 기업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와 같은 나라가 버티는 것은 네슬레와 같은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도 사실 몇몇의 초일류 기업에 의해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초국경의 네트워크 조직의 위성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서용: 문제는 그런 초일류 기업들이 우리와 같은 대기업 집단의 형태와 경영 전략을 가졌는가입니다. 분명히 백화점식 조직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 집단 형태가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좌승희: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대기업 집단'의 다각화가 시장 보호와 진입 제한 때문에 생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규제는 풀어야 합니다. 다각화를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국민 정서를 말하자면, 기업간의 경쟁을 부추겨서 경영이 정말 힘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 정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점을 막는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적극적으로 하고 다른 규제는 풀어서 시장 경제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정부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회: 21세기를 대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기업 관련 제도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화제를 바꾸어서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에서 어떻게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 정보, 디자인, 유통 산업 등 서비스 부문을 선진화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물건 잘 만드는 것만 가지고는 경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

리나라의 경우는 금융 산업도 큰 문제가 아닙니까.

손병두: 우리나라가 지금 경쟁력을 잃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금융 산업의 낙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을 위한 핵심은 금융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 다른 산업도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인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주인이 있다면, 현재 금융 기관에 있는 인원의 1/3가지고도 충분히 경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니까 금리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래 비용이 높는데 어떻게 쉽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곽수일: 저는 은행장선임제도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자본의 금융 진출이 문제가 된다면, 금융 전업 법인이라도 구성해서 주인을 만들어주고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가 영향력을 포기하려 들지 않습니다.

좌승희: 금융과 산업간의 관계는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측에서는 아직 입장 정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대상을 소유로 할지, 경영으로 할지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의 대기업이 은행 주식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고 해도, 4%에 해당하는 권리는 행사하게 해야 하는데 주식 소유도 제한하고 권리 행사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혼자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손병두: 사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장 경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국민 정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여기에는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너무나 국민 정서에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비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영역은 기업한테 맡겨질 수 있도록, 언론도 여론을 주도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반시장 경제적인 정서가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좌승희: 30년 동안 대기업 집단 추이를 보니까, 수명이 30년이 안되더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60년대에서 70년대의 대기업이 M&A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익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 복지 문제, 사회 문제 내지는 SOC 문제 등의 참여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바로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기업의 몫입니다. 과거에는 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산업 구조 조정과 같은 문제까지 개입했지만, 이제 기업 스스로가 경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 목표도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서용: 저도 물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 형태가 과연 21세기를 열어갈 수 있겠는가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누차 말했으니 완화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장 경제 질서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경쟁에 의해 기업이 망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마찰이 클 것입니다. 자율 경쟁 과정에서 발생할 정치·사회적 마찰에 대한 해결책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진지한 토론으로 많은 문제들에 걸쳐 중요한 요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21세기를 대비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위해 발전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